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동향 및 현지 반응 2
- 무역법 122조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 활용해 수입 관세 정책 유지 표명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판결 후 232조 국가안보 관세 도입 검토 5
- (정책)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서 '민생·경제' 부각 및 부담 완화 조치 예고 6

🏛️ 의회법안 동향

- 중국 경제, IEEPA 관세 등 5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9

📅 워싱턴 D.C. 주요일정

2.25(수)	•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발언 (Kansas City Fed President Jeffrey Schmid speaks)
2.26(목)	• 2월 3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Initial jobless claims)
2.27(금)	•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Core PPI year over year)
3.2(월)	• 2월 미국 S&P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확정) (S&P final U.S. manufacturing PMI)

(관세)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동향 및 현지 반응

1. 개요

□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주요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IEEPA 관세 징수 중단지시 행정명령 발동 및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기반, 10% 전면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령 발표(2.20)**

* 대통령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시 등 비상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 연장 시 의회 승인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사유) 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제재) 등 기존 법적 통상 수단을 활용해 수입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표명
- 10% 관세는 모든 수입국 대상 150일 한시적으로 시행(2월 24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부터), 단 특정 품목과 기존 협정 대상 품목 등은 제외

- 농산물(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의약품·의약 성분, 일부 핵심 광물·금속, 에너지·에너지 제품, 특정 전자제품, 항공 관련 품목, 서적·기부물품·수하물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
- 기존 232조 대상 품목, 캐나다·멕시코의 USMCA 적합품, 특정 CAFTA-DR 국가의 면세 섬유·의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무효)** ▲ 상호관세(10%~50%), ▲ 對中 펜타닐 관세(10%), ▲ 對캐나다·멕시코 국경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 **(유지)** ▲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구리 50%, 자동차·목재 25% 등), ▲ 무역법 301조 對中 관세, ▲ de minimis(800달러 미만 저가 수입 면세) 규정 전면 철회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상황의 긴급성으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무역법 122조 법령상 허용되는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언급(2.21)**

-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15% 관세 인상은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적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수 할 가능성 시사(2.23)

2. 현지 반응

□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한 관세 유지 표명,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중대 영향 가능성 제기

•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적/통상 수단을 활용한 수입 관세 정책의 연속성 강조

- 트럼프 대통령,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보복 관세 부과 경고(트루스 소셜 2.23)
- 베선트 재무장관은 △1,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이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 △122·232·301조 등 대체 관세 수단을 통해 '26년 관세 수입 변화는 없을 것 전망, △이번 판결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 지적
- 또한 무역 파트너들에게 IEEPA 관세에 따라 기 체결된 합의 준수를 촉구
- 그리어 USTR 대표는 301조 조사를 통해 주요 교역국 대상 신규 조사 착수 개시*를 예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율 옹호

* 조사 분야로는 △공급 과잉 △강제 노동 △약가 정책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 △디지털 교역 및 세제 △해양오염 △농수산물 수입 장벽 등을 거론

• (언론) 트럼프 행정부 경제 의제 타격, 후속 절차 혼란, 추가 소송 가능성 제기

- IEEPA 관세는 약 1,3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의제에 중대한 타격(Significant blow)으로 보도(NYT)
- 기징수된 IEEPA 관세 관련해 수천 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적 법적·행정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 제기(블룸버그)
- 기업 비용 절감 가능성을 강조하고 평균 관세율 완화 전망(CBS)
-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중 펜타닐 관세, 캐나다·멕시코 국경관세를 무효화하는 놀라운 사법적 견제(stunning rubuke)로 지적(폴리티코)

• (싱크탱크/연구 기관) IEEPA 관세 무효화의 경제 정치 절차적 영향 분석

-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의 승리로 환영하고, 행정부의 관세·세입 권한의 제약 및 의회의 헌법상 조세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Cato Institute)

-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비판하고 대통령의 국가안보 기반 경제 조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헤리티지 재단)
 - 브라질이 평균 관세율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약 13.6%포인트↓), 중국(약 7.1%포인트↓) 감소로 상대적 이익 분석(Global Trade Alert)
 -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지정학적 파장 지적, 미국 무역의 전략 변화 예상(CSIS), 트럼프 경제 의제에 큰 타격이며 다자간 무역 대응 촉구(Chatham House)
 - 관세 무효화로 재정적으로 '2조 달러 적자 증가' 경고, 의회가 세금 인상, 지출 삭감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FB)
 -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122조 관세가 즉시 대체되며 관세 부담은 유지되고 단기적으로 물가·성장·고용에는 악영향 지적(예일대 Budget Lab)
- (관세·법률 전문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의 해석 차이 및 관세 소송 가능성 제기
 - 1974년 제정 후 50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무역법 122조 조항의 목적(외환보유고·지급위기 등) 외 확대 해석*이 사법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 제기
 -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trade deficit) 해석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블룸버그)
 - 관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우선 활용 후 232조·301조를 중심으로 장기 관세 체계를 재편할 가능성 언급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블룸버그(2.20)(2.20), 인사이드(2.23), 등 현지 언론 및 싱크탱크 종합

(관세)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판결 후 232조 국가안보 관세 도입 검토

• (개요) 232조 조사 권한을 활용한 신규 국가안보 관세 부과 검토 중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권한을 활용해 대용량 배터리·주철 및 철제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품목에 대한 신규 조사 착수 검토 추진

* 무역확장법(1962) 제232조: 상무부 주도의 조사 절차를 전제하나, 조치 발동 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IEEPA 판결과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운용 가능

• (상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방식 개편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 전망

-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등에 부과된 기존 232조 관세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며, 행정부는 반도체·의약품·드론·산업용 로봇·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등 기 진행 중인 조사도 가속할 방침
-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과세표준) 방식을 조정해 명목세율은 낮추되 완제품 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실효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준수 목적으로 일부 관세 적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
- 전문가들은 232조가 관세율 상한이 없고 대통령 단독 조정이 가능해 IEEPA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나, 상호관세를 전면 대체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
 -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부는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WSJ(2.23), 로이터(2.23)

(정책)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서 ‘민생·경제’ 부각 및 부담 완화 조치 예고

- (개요) 트럼프 대통령, ‘건국 250주년’ 경제성과·물가 부담 완화 메시지 집중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공식 주제를 ‘건국 250주년: 강하고 번영하며 존중받는 미국(America at 250: Strong, Prosperous and Respected)’로 설정하고, 경제 성과 및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할 예정(2.24, 미 동부시간 21:00)
- (상세) 감세, 약가 인하 등 정책 성과 강조, AI 전력비 부담 완화 조치 발표 예정
 - (경제) 전년도 공화당 주도의 감세 입법 성과(‘One Big Beautiful Act’) 및 정부 추진 처방약 가격 인하 노력 등을 주요 정책 성과로 제시할 전망
 - (보건) 연초 발표한 보건의료 프레임워크의 입법화를 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며, 프레임워크에는 연방 보조금을 보험사에서 소비자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구상이 포함
 - (에너지) 주요 기술기업과 협의한 ‘rate payer protection pledges(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지역의 전력비 증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
 - (이민) 국경안보 강화 및 강력범죄 단속 성과를 부각하고, 대도시 범죄율 하락 등을 정책 효과로 제시할 전망
 - (안보) 중동 지역 군사력 증강, 이란 핵 협상 등 현안을 배경으로 ‘peace through strength’ 대외 전략도 일부 언급 예상
- (반응) 경제 체감 부진 속 성과 부각 필요성 제기·관세 판결 이후 통상 메시지 주목
 -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경제·물가 불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평가·홍보하되 생활비 부담 우려를 병행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일부 전문가는 이번 연설이 미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 발표 가능성을 전망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 WSJ(2.23), 로이터(2.24), CBC(2.24)

미국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외국 견제 (2.20)	H.R.7604 (하) (2.20)	Lauren Boebert (공)	<국제 소프트웨어 소유 연방 계약 금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소유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특정 연방 계약 금지하는 법안 연방 정부 데이터보안 강화를 위한 해외 소유 소프트웨어 계약을 제한하는 법안
중국 견제 (2.20)	H.R.7635 (하) (2.20)	Gregory Steube (공)	<중국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입 금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내 기업이 생산한 특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IEEPA 관세 (2.23)	H.R.7615 (하) (2.20)	Steven Horsford (민)	<관세 환급법안(Tariff Refund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환급을 CBP에 의무화하는 법안
	H.R.7636 (하) (2.20)	Mike Thompson (민)	<관세 환급법안(Tariff Refund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세법을 개정하여 개인 관세 환급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H.R.7637 (하) (2.23)	Jasmine Crockett (민)	<관세 환급법안(Tariff Refund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관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부담 증가분을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

* 미국 동부 시간 2월 24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Exclusive: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Requiring Banks to Collect Citizenship Information</u> ([단독] 트럼프 행정부, 은행에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중)</p> <p>미국 은행은 비시민권자에게도 계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Know Your Customers 규정에 따라 SSN 등을 수집해왔으나 시민권 정보는 미포함.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p>
The Washington Post	<p><u>We asked 2,300 Americans about the best and worst things Trump has done.</u> (미국인 2,300명이 선정한 트럼프 업적 중 최고와 최악은?)</p> <p>워싱턴포스트, ABC뉴스, 입소스가 미국인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 정책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비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업적으로 꼽혀</p>
The New York Times	<p><u>House Rejects Air Safety Bill After Pentagon Reverses Position</u> (美 하원, 국방부 입장 번복 후 “항공 안전 법안” 부결)</p> <p>공중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추적기술을 비행기에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항공 안전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번주 펜타곤이 국가안보·비용 문제로 지지를 철회하자 한 표 차이로 하원에서 부결돼</p>
CNN	<p><u>This is the state of the economy (ahead of the State of the Union)</u> (국정연설 전 살펴보는 미국 경제 현황)</p> <p>지표 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하 일자리, 임금, 소비, 인플레이션 등은 안정적이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p>
USA Today	<p><u>Majority says Trump is growing erratic with age: Reuters/Ipsos poll</u>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트럼프는 점점 변덕스러워져?)</p> <p>로이터/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들며 변덕스러워졌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해. 또, 응답자의 79%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미국을 대표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응답</p>

* 미국 동부 시간 2월 24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6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코인사-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